

# 검·경·공, 한자리에 모인다… 범국가적 수사 협의체 예고

(검찰·경찰·공수처)

수사 기관 대면협상 예정  
중복수사로 인한 혼선 최소화  
“참석자, 일정 등은 조율 중”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협의체를 가동할 예정이다. 이번 사태가 현직 대통령과 군 수뇌부, 경찰 지휘부가 모두 관여한 내란 혐의 사건이라는 점에서 각 수사 기관들이 중복 수사를 벌여 혼선을 빚고 있다는 지적 속에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전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 수사단(국수본)과 공수처에 공문을 보내 수사 관련 협의를 제안했고, 두 기관 모두 참석 의사를 밝혔다.

경찰 국수본은 “3개 기관이 모두 참석한다면 안 갈 이유는 없다”고 답했다. 공수처도 “대검찰청과 국수본이 참여하는



심우정 검찰총장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협의를 참석할 예정”이라며 “다만 참석자와 일정 등은 조율 중”이라고 전했다. 조만간 세 개 수사기관은 수사 협의체 가동을 위한 대면 협상에 나설 예정이다.

검찰과 경찰, 공수처 모두 중복 수사로 인한 혼선을 막기 위해 수사에 협조

하기로 한 만큼 협의 일정을 조율한 뒤 수사 진행 상황 공유 등 합동 수사 여부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전까지 비상계엄 사태 관련 검찰과 경찰, 공수처 모두 수사 주체임을 천명하며 각자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수사검사와 군검사, 수사관

등 60여명으로 구성된 특별수사본부(특수본)를, 경찰은 수사관 150명 규모의 특별수사단을 꾸려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이 윤 대통령에게 계엄을 건의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자, 경찰은 김 전 장관 공관 및 집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수사를 둘러싼 검·경 간 주도권 경쟁을 벌였다.

검찰과 경찰은 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출국금지를 각각 처리·완료하는 등 중복 조치를 하기도 했다. 경찰과 검찰, 공수처로부터 계엄 사태 관련 CCTV 영상 등을 제공해달라는 수사 협조 요청을 받은 국회사무처는 영상과 피해 상황을 각 수사기관에 제출해야만 했다.

이에, 검찰은 경찰 국수본 측에 합동 수사본부를 구성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나 경찰이 이를 거부해 무산됐다. 경찰은 ‘내란죄’의 직접 수사가 경찰 소관인 만큼 국가수사본부가 정당한 수사 주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후 공수처가 검찰과 경찰에 비상계엄 선포 관련 사건을 이첩해 줄 것을 요청하며 혼란이 가중됐다.

공수처는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보장된 독립수사기관”이라며 이첩 요구권을 발동했다. 공수처법 제24조에 따르면 공수처의 범죄 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범죄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공정

성 논란에 비춰 공수처의 수사가 적절하다 판단되면 이첩 요청이 가능하다.

공수처도 현재 비상계엄 선포 사태 직후 차·차장을 제외한 검사 11명 전원과 수사관 36명 등 50명의 인력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공수처는 전날 수사기관 중 처음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하는 등 수사 주도권을 둘러싼 각 수사기관의 혼선이 빚어졌다.

그러자, 법원행정처 처장은 직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현 상황에 우려를 표했다.

이처럼 수사기관 간 주도권 경쟁으로 수사에 혼선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데다 법원이 중복수사를 이유로 공수처가 신청한 영장들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세 개 수사기관 모두 개별 수사를 하기에 부담이 커진 모양새다.

이에 검찰은 수사 혼선의 해소가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라 경찰과 공수처에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고, 경찰도 수사에 협조하는 것으로 입장을 바꾼 것으로 풀이된다.

공수처 또한 전날 수사 공정성을 이유로 검찰·경찰에 비상계엄 사건 수사 이첩을 요구하면서도 합동 수사 요청이 있을 경우 검토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전날 대검과 사건 이첩과 관련한 협의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승일 기자 won@metroseoul.co.kr

대표전화 1544-1120
www.kibo.or.kr

## 상상했던 기술 꿈꿔왔던 내일

내일이 기대되는 이유는  
기술기업의 꿈이 담긴 기술 덕분입니다

K

I

B

O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혁신형 기업에 기술보증 및 기술평가를 중점지원하여 기업의 기술경쟁력을 제고하고 나아가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동력 창출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기술금융 전문지원기관입니다.

KIBO

기술보증기금

##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소득세법 개정안 국회 통과  
韓 증시 불확실성 감소 기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인 투자자들의 ‘국장 탈출’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 결정으로 한국 증시의 불확실성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금투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포함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안건으로 다뤄졌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과 전종덕 진보당 의원은 해당 개정안에 반대 토론을 벌였다. 차 의원은 “금투세가 시행되면 큰손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을 떠나게 되어 개미 투자자가 피해를 볼 것이라는 주장이 영향을 미쳤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근거는 없다”며 “2014년 일본의 주식 양도차익세율이 두 배로 올랐을 때도 닛케이 지수는 1년간 7.1% 상승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개정안은 재석 의원 275명 중 찬성 204명, 반대 33명, 기권 38명으로 가결됐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 기타 25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초과 소득의 20%를 부과하는 세금이다. 2020년 6월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이 발표된 이후 2022년

시행이 2년 유예되었지만, 이번 개정안 통과로 완전히 폐지됐다.

가상자산 과세도 2년 유예됐다. 원래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소득금액에서 25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20%의 세금(지방세 포함 22%)을 부과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2025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본회의의 결과는 예견됐다는 반응도 있다. 금융당국과 민주당이 해당 개정안에 대해 사전에 ‘입장 조정은 없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오전 글로벌 투자은행(IB) 애널리스트들과의 간담회에서 “금투세 폐지와 자본시장법 개정 등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은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여야 모두 이견이 없는 이슈이며, 투자 심리 안정에 긴요한 법안이어서 적시에 원만히 처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본회의에 앞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금투세와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 우리 당이 약속했던 것은 반영할 것”이라며 “정국이 급변하더라도 약속한 입장을 바꾸지는 않을 것”이라고 언급하며, 금투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대한 강한 ‘시그널’을 준 바 있다.

/허정윤 기자 zelkova@